

광주공항, 무안공항으로 통합... 설 밥상 오를 최대 이슈



오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에는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무안공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번 설 연휴에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등 3당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설 민심은 곧바로 6·13 지방선거의 향배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지역민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세력을 모으고 지역현안들을 쟁점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과거보다 더 강도가 세진 정당들의 '구애'를 받으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수 있게 됐다.

설 연휴에 거론될 가장 큰 지역 내 이슈는 광주·전남의 공통 현안이자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11년간 반복된 논쟁인 '광주(민간)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통합' 문제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올 초 '거대 담판'을 주장하며 "미래로 가는데 있어 광주·전남 경계를 뛰어 넘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 중국 관계, 산업 지형 등에 있어서 고민해줘야 할 것이 바로 광주공항 이전 문제다.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사실상 제주노선만 제대로 운행되고 있는 광주공항을 군공항과 함께 이전해 무안공항을 명실상부한 국토 서남해안의 거점공항으로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전남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을 상대로 국제선을 유지하면서 저가항공사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공항산업이 발흥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영 전남지사권한대행은 로드맵 제시와 함께 이전 후보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항 통합 문제는 민선 7기의 핵심사업으로 부상할 예정으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이전후보지 단체장 등의 협의에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광주·전남 지방선거 이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찬반 논쟁 도시공원 일몰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심 전남 인구절벽 해법·SOC 확충 방안 최우선

광주의 경우 15년간 찬반논쟁에 사로잡혀있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또다시 거론될 조짐이다. 일부 후보들이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하면서 반대파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분위기다. 4년 전인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윤장현 후보가 '재검토'를 공약해 2년여간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을 결정하고 '임기내 착공'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후보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민 여론도 2호선 추진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운행에 필요한 철도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시내버스, 도시철도 1호선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20년 상반기로 다가오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역시 입방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단계(수랑·마록·송암·봉산공원)에 이어 중앙, 중외, 일곡 등 2단계가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다. 광주의 대표공원에 고층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다. 공원 일몰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 역시 민선 7기가 안이할 문제다.

일자리 문제는 전국 이슈가 되고 있지만, 특히 질높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광주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한국전력 등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하면서 지역인재 채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지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각종 당파들의 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주거·교육·의료혜택을 제공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광주형 일자리'의 계속 추진 여부도 민선 7기에서 고민해야 할 안건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대표 작품'이기 때문이다. 윤 시장은 이를 통해 해외로 진출했거나 하려는 대기업의 말고삐를 광주로 돌려 미래세대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아파트 도시'로 변질되고 있는 문화수도 광주에 대한 반성, 도시재생뉴딜 등 몰락하고 있는 구도심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좀 더 신속한 대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한 문화산업의 발전 방안 마련, 지역 대표산업 추가 발굴 및 지역 아젠다 정립 등도 시민들이 각 정당에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역의 경우 최대 현안은 인구절벽 해법과 부족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이다. 인구감소 문제는 전남의 존립을 좌우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문화, 출산·육아, 정주 여건 등 도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남 인구는 지난해 190만명이 붕괴됐다. 출생아수도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전남 출생아수는 1만2532명으로, 전년(1만3980명)대비 10.4%포인트 감소했다. 2015년(1만5061명)과 비교하면 2년 사이

에 16.8%(2529명) 급감했다. 또 귀농·귀어·귀촌자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관광객 등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직·간접적인 인구증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다. 신중년(50~64세)과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고령자 맞춤형 거주환경을 조성해 '전국 제1의 고령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남도는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부족한 SOC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장인 전남도지사가 공식인데다 지방선거까지 겹쳐 국비 확보 차질 우려가 높다. 이를 걱정해서인지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지난달 실국장 토론회에서 "전남은 지방선거 부담이 없다"며 "올 상반기에 내린 국고 확보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예산 반영은 중앙부처 실무자 접촉과 비례한다. 중앙으로 가라"고 권장했다.

다른 지자체가 단체장 선거 출마로 여수선할 때, 전남도는 국고 확보 사업에 몰입하자는 의미다.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부활과 혁신공향 건설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역발전 3대 전략으로 추진해왔던 숲과 섬 가꾸기, 에너지신산업 육성, 남도문에 르네상스 사업도 주목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3당 지방선거 경선·공천률

후보 많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경선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후보난 민평당·바른미래당

전략공천 가능성... 연합공천 등 정치 실험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인 공천·경선률을 정했지만 국민의당 분당으로 탄생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제부터 공천률과 경선률을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민주당=민주당은 지난 7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어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경선을 유권자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되, 권리당원선거인단과 안심번호제를 이용한 국민(권리당원)이 아닌 일반국민의 의견을 각각 50%씩 반영기로 결정했다. 또 지방(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전원 권리당원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경선조사 방식은 양쪽 모두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하되 보충적으로 현장 투표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아울러 경선에 앞서 공천 심사 시 정책성과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와 이의신청처리위원회도 각각 구성했다. 후보자검증위 위원장에는 윤호중(구리) 의원이, 이의신청처리위 위원장에는 인재근 의원이 각각 인선됐다.

검증위 위원으로는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현 의원을 비롯해 송옥주 의원, 정상호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유진희 변호사,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이의신청처리위에는 김해영 의원과 문병운 변호사, 오영중 변호사, 김소연씨가 포함됐다.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양 당 모두 신생정당이어서 아직 공천률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이 분당해 탄생한 정당이니만큼 국민의당 당헌당규가 기본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바른정당과의 합당으로 탄생했지만 바른정당은 전국적 공천을 시도한 적이 없어 국민의당의 입장이 더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민의당 당헌에 따르면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과 관련,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되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다만, '선거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경선으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단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전략공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당 당규에는 경선의 방법으로 정당원투표, 국민 참여경선, 여론조사 등의 방식이 있다고 했다. 또 공천관리위원회는 1개의 선거구에 2개 이상의 경선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물론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두 당 모두 모든 선거구에서 경선이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분당과 창당 과정을 거치면서 당세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공천 지역이 많을 것이라 기대 당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또한, 신당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 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

민평당 관계자는 13일 "신생 정당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시도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거대 정당이 쓸 수 없는 혁신적 공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정당, 무소속으로 있는 인물을 모두 포함해서 어떤 사람을 공천해야 하나 또는 어떤 사람을 단체장으로 뽑아야 하나 물어 그 결과를 가지고 공천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즉, 당내 인사만으로는 경쟁력 있는 인물을 찾을 수 없을 경우 경계를 무너뜨려 인재를 찾아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영입해 전략공천하거나 다른 정당과 연합공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민평당 관계자는 "호남의 경우 경선이 가능한 지역이 많겠지만 전국적으로는 경선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을 것"이라며 "호남에서 경선 관리가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늦게 출범한 탓도 있지만 다른 경쟁 정당의 공천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공천 일정도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구례, 그랜드 호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1-2
지리산은천 정문 바로 앞, 최고위치
- 대지489평, 건물 768평, 대형객실 40개
- 지하1 지상4층, 엘리베이터 유
- 식당(300명 수용), 커피숍, 단란주점/세미나실
- 케이블카 설치 최우선 지역
- 연 매출 8~10억/순수익 4억~5억 가능
- 감정가 / 시세 - 25억
매매 - 20억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2월 중순 입주가능
- 시세 - 1억
매매 - 7200만원

주인직매 H.010-3605-5000